光日春秋

고 원 정

지구의를 보는 마음

해묵은 1970년대식 우스개를 소개하자. 한 장학사가 일선학교에 들렀다. 어느 교실에 들어가보니 마침 교탁 위에 둥근 지구의를 올려놓고 지리수업을 하고 있었다. 장학사는 23.5도 기울어진 지구의를 가리키며 맨 앞줄 학생에게 물어보았다.

"이게 왜 비뚤어져 있지?"

학생이 대답했다.

"제가 안그랬습니다."

어이없어진 장학사가 이번엔 교사에게 질문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사올 때부터 그랬습니다."

장학사는 교장선생을 모셔오도록 했다. 전말을 듣고 난 교장선생은 머리를 긁적이며 쑥스럽게 말했다.

"원래 국산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획일성·관료주의·자기비하 등을 뭉뚱그려 비꼰 농담으로 한동안 인구에 회자되었던 내용이다. 그래도 이 농담 속의 교실은 상황이 좀 낫다고 할 수 있다. 지구의를 갖다놓고 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날의 우리들은 대부분 벽걸이 스타일의 평면지도를 갖다놓고 세계지리를 배웠다. 왼쪽에는 유럽과 아프리카가 있고 아시아가 가운데,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이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우리에게는 상식이다. 그런데 서양인들이 쓰는 세계지도는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일종의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들의 지도에는 유럽과 아프리카가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왼쪽이 아메리카이고 오른쪽이 아시아 대륙이다. 그 지도를 보면 이해가 간다. 왜 서양인들이 우리나라가 있는 지역을 두고 극동이니 동북아니 하고 부르는지를. 중동이 왜 중동인지를. 유럽인들이 어떻게 아메리카로 건너갔으며 어떤 경로로 잔인한 노예매매가 이루어졌는가를. 하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당연히 만국공통이라고 생각했던 세계지도가 저마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우리는 우리식 지도를, 서양인들은 서양식 지도를 가지고 있다니! 지금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스타일의 세계지도를 고안해낸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그 어떤 도법으로도 평면 위에 둥근 지구의 형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일은 부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지도의 근본은 지구의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평면지도가 아닌 둥근 지구의를 놓고 세계를 생각하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평면지도에는 중심부와 변방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니치 자오선을 따르면서도 한사코 아시아를 가운데 앉힌 아시아식 세계지도에는 서세동점의 격류 속에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는 아시아인들의 의지가 배어 있다. 우리가 중심이라는 관점이다.

유럽인들은 또 당연하게도 자신들의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생각했다. 극동이니 동북아니 하는 호칭은 우리가 원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아 붙인 이름일 뿐이다. 그들의 세계지도 속에서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방일 따름이다. 지도의 오른쪽 끝이 왼쪽 끝과 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어느나라 사람이나 쉽게 깨닫지 못한다.

둥근 지구의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중심과 변방이 따로 있지 않다. 조금만 돌려서 보면 중심이 변방이 되고 변방이 중심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지구의 본래 생겨먹은 모양새이기도 하다. 지금 내가 디디고 선 땅이 세계의 중심임을 알아야 한다. 다른 모든 이들 또한 저마다 세계의 중심에 서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한 중심이 다른 중심을 배척해야 할 이유가 없다. 변방이라 백안시할 권리도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 지구의를 처음 들여온 사람은 조선 인조 때의 소현세자로 알려져 있다.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갔다가 1645년에 귀국할 때 가져왔다는 것이다. 360여년이 지난 셈이다. 이제는 이 지구의를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글로벌리즘이 화두가 되고 FTA가 최대 현안이 되는 시대, 우리와 피부색깔이 다른 외국인들이 직장 동료가 되고 이웃집 며느리가 되는 시대다. 나만을 중심에 놓고 다른 이들의 자리를 변방이라 치부해버리는 평면지도식 사고방식은 버려야 한다. 모두가 중심이기에 모두가 소중하다는 열린 생각을 가져야 한다. 어찌 지리공부에만 국한할 일이겠는가. 둥근 지구의를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소설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 고

전 상 훈

교육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자

교육이란 무엇일까?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일이며 가치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바람직하게 성장·변화시키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실상, 학교 현장을 들여다볼라치면 이러한 본질은 온데 간 데 없고 사이비 교육만이 판을 치고 있다. 입시중심의 교육체제 하나만 놓고 생각해 보자. 세계에 그 유래가 없는 대한민국만의 병리적 사회풍토 속에서 학교가 단순한 입시교육기관으로 전락한 지는 이미 오래다.

안타까운 것은 교육수요자들의 맹목적 의존으로 급속히 팽창하는 사교육시장의 위세에 밀린 나머지 본래적 기능의 하나였던 지식전수기능마저도 불신을 받기에 이른 학교가 이제 단순히 학생들의 학적관리나 해주는 곳으로 비춰지면서 자연스럽게 학교교육 무용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른들이 하는 일이라곤 경쟁을 부추기고 극도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것뿐인 우리의 교육현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인간으로 자라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정의와 양심,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해야 할 소중한 시기에, 옳고 그름을 따질 겨를도 없이, 불을 보고 뛰어드는 부나방처럼 욕망에 눈 먼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아이들. 그들의 행복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언젠가 한 언론의 '전쟁 및 국가 위기시 행동에 대한 한중일 청소년 의식 비교 조사' 결과,'전쟁이 나면 싸우겠다.'는 학생이 일본(41%)보다 한 참 낮은 10.2%에 불과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흔히 있는 일이고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것쯤으로 넘어가도 되는 것일까? '내 나라가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중국의 경우 60%인데 우리는 38%에 그치고 있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학생들의 의식일까? 한 개에 10만원이 넘는 루이뷔통 머리방울이나 헤어밴드를 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한 현실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먹고 아무데나 버리는 통에 학교가 온통 쓰레기로 넘쳐나고 어쩌다 선생님이 회초리라도 들라치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그 현장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려 덤벼드는 아이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단 말인가.

지금 일선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통합적 인성교육이나 사회교육은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이다. 도덕이나 윤리 교과목, 혹은 사회와 역사 교과목을 배우고는 있지만 그것은 단순한 이수과정의 하나로서 존재할 뿐 실천적 가치 덕목으로서 내면화된 교육활동은 실종되고 만 것이다. 잘못된 교육, 얼빠진 교육으로 아이들의 영혼이 썩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면 무엇할 것인가.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 혼이 있는 교육, 철학이 있는 교육으로. 가르칠 것을 마땅히 가르치고 배울 것을 제대로 배우는, 지식과 인간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교육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지산중학교 교감〉

기 고

신 성 수

농어민 재테크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축복받는 일일까?' 엇갈린 답들이 도출되겠으나, 인생살이를 돈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결코 쉬운 결론을 내릴 수 없다.

LG경제연구원은 40세 부부가 군(郡) 지역에서 평균수준을 누릴 수 있는 노후자금은 1억8천만원, 품위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노후자금은 3억4천만이 필요하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자식보험'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마찬가지다. 나보다 더 나은 자녀로 키우기 위해 교육비 지출을 늘리고, 나의 노후를 돌봐주길 기대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생긴 말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동패널이 '60세 이상 고령자는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이를 배반한다. '자식들이 봉양한다'는 응답이 1980년대는 72.4%였으나 2003년에는 31.1%로 급감했다. 부모가 스스로 벌어 생계를 유지한다는 응답도 1980년대 16.2%에서 2003년도는 30.4%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농촌도 예외는 아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농어업기본 통계조사에 따르면 농가인구는 2005년대비 3.8% 감소한 330만명, 농가수는 2.2% 감소한 124만5천가구였으며 65세 이상 농가인구가 2006년 들어 30.8%를 돌파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전국 고령화 비율이 9.5%인 반면 농촌은 이미 초초고령화사회에 들어서 있다.

도시근로자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한 농민들은 당장부터라도 은퇴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 현재 소득이 있는 가장의 나이를 중심으로 미래에 닥칠 가족들의 중요한 사건을 예측해보는 게 중요하다.

둘째, 사교육비를 가능한한 줄여나가야 한다.

셋째, 소비를 통제하자. 소비통제를 위해서는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한다. 생활비·용돈 등 성격에 맞는 통장을 개설하고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면 절제된 소비를 할 수 있다.

넷째,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간(소득이 없는 55세 퇴직부터 64세 수령시까지 약10년)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금가입이 꼭 필요하다.

다섯째,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자. 비과세상품 중 2009년까지 가입가능한 농·수협,새마을금고 예탁금은 1천만원까지, 생계형저축(남자 60세이상,여자 55세 이상)은 3천만원까지 전액 비과세되는 상품을 100% 활용하자.

여섯째,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을 시키고 올바른 소비습관과 독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농촌에서도 이제부터라도 도시근로자 못지않은 착실한 준비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본부장〉

사 설

주택담보대출 '이자 폭탄' 서민 허리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서민 가계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집값은 제자리인 반면 주택대출 금리만 급등하고 있어 '부동산 발(發) 가계 파산'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연 평균 8천300억원(14.9%)씩 늘면서 총 가계대출 잔고가 9조5천억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주택관련 대출 비중이 83·7%에 이르렀다. 특히 지역내 주택대출의 95%가 변동금리부 조건인데다 만기가 짧아 이자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1.83%포인트나 올랐다. 이는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렸다면 이자부담이 183만원 늘었다는 얘기다. 대출금리 인상은 곧 가계의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이자 부담의 증가로 가계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자폭탄'이 현실화될 경우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가계와 금융기관이 동반부실해지는 가계발 금융위기까지 올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지난해 가계의 금융자산은 8.6% 늘어났는데 부채는 11.6%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계의 채무 감내 능력이 그만큼 저하돼 시장금리 상승 충격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방의 경우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서민 가계는 파산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전체 가계자산의 80% 정도가 주택 등 부동산이다. 금리인상이나 소득 감소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파장이 큰 것이다. 정부는 이자부담 증가가 서민 가계의 파산으로 치닫지 않도록 세심한 관찰을 하는 한편 경기를 활성화해 소득을 증대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을 안정화 시켜야 할 것이다.

광주시 교통질서 단속 '용두사미' 안 돼야

광주시가 오는 10월 전국체전을 앞두고 교통기초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장비와 인력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 불법 주·정차와 신호위반 등을 집중 단속키로 한 것이다. 광주의 교통질서가 최악인 상황을 감안하면 광주시의 조치는 만시지탄이라 할 수 있다.

광주시내에서 교통기초질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간선 및 지선도로는 물론 주택가 골목까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1차선 편도 양쪽에도 불법 주·정차를 일삼아 자동차가 빠져나가기조차 힘들다. 자치단체들이 견인 등 단속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등도 성행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 배포 및 부착과 쓰레기 투기 등도 여전하다. '문화수도'나 '예향' 광주가 부끄러울 정도다. 오죽하면 운전자 스스로 광주의 교통질서가 전국에서 가장 엉망이라고 혹평하고 있을까.

교통질서를 근본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민의식의 고양이 중요하다. 하지만 광주의 교통질서는 교육과 캠페인 등 간접수단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수준이다. 벌금 등 '강제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광주의 교통질서가 이같이 엉망이 된 데는 행정 당국의 책임이 크다. 불법 주·정차와 신호위반 등 불법행위는 민선자치 이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시민들은 자치단체들이 선거 때 '표'를 의식해 단속을 아예 포기하며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피해를 보게 된다. 광주시는 엄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어기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단속이 '용두사미'에 그쳐서는 '교통질서 최악의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無 等 鼓

미국산 쇠고기

원래 아메리카 대륙에는 소가 없었다. 드넓은 서부 대평원의 주인공은 인디언들과 수백만 마리의 버펄로(아메리카 들소)였다.

텍사스에서 사육되기 시작한 유럽산 소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풍부한 목초지를 찾아 서부 대평원으로의 이동이 시작됐다. 그러나 버펄로와 인디언이 걸림돌이었다. 소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는 버펄로가 사라져주어야 했고 버펄로를 양식으로 삼는 인디언들도 제거 대상이었다.

지난 1869년 대륙횡단철도가 개통되면서 대학살은 본격화됐다. 1873년 한해에만 400만 마리의 버펄로가 희생됐으며 인디언들도 보호구역으로 밀려났다.

당시 유럽인들에게 아메리카 대륙에서 키운 쇠고기는 큰 인기였다. 처음에는 방목상태에서 지천으로 널려 있는 옥수수를 사료로 먹였으나 살찐 소를 만들기 위해 대규모 '공장식 축산' 방식이 도입되고 동물 내장과 뼛가루 등으로 만든 사료를 먹이기 시작했다. 이때문에 지난 1986년 영국에서 처음 발생된 광우병은 쇠고기 생산을 늘리기 위해 초식동물에 육식성 사료를 먹인 인간의 욕심이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파리에서 열린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서 미국이 광우병 방지 조치가 갖춰진 국가로 판정받으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개방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수 없다면 차제에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산지 소값은 내려도 도시 소비자들은 여전히 비싼 가격에 쇠고기를 구입해야 하는 유통구조도 개선되어야 한다.

전북 정읍시 산외면 한우마을의 성공사례는 유통 구조의 거품을 제거한 결과다. 전남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한우마을 조성을 추진 중이다.

오랜 세월 농민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한우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미국산 쇠고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사회 약자형' 교통체계로 고령화시대 대비해야

교통사로로 인한 국가손실액이 14조원으로 부끄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 최상위권이라 한다.

과실과 부주의는 각자의 문제이지만 제도적 문제 개선은 국민 전체의 몫이 아닌가 싶다. 우리사회도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교통체계를 사회적 약자형으로 바꿔야 할 때라고 본다.

보행자 중심 맞춤형 교통신호체계 변경이 우선이다. 특히 노인, 어린이의 보행속도를 감안해 횡단보도 통행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 현행 규정은 진입시간 7초에 도로폭 1m당 1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0.8m당 1초인 몇몇 선진국에 비해 시간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횡단보도 신호체계이다.

어린이의 스쿨존과 노인들의 통행이 빈번한 공원, 산책지 주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근본적인 체제정비를 해야 한다.

횡단보도 통행시간을 늘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교차로 운전자 통행시간도 늘게 될 것이고, 운전 습관 또한 좀 더 여유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교통신호체계 변경이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인간중심 교통정책의 첫걸음이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정렬·광주시 서구 화정동

장난전화 등 허위신고자 처벌 수위 너무 미약하다

공항, 기차역이나 주요 건물 등 사람이 많이 모여든 장소에 "폭탄을 설치하였으니 조심하라"는 식의 허위 장난전화가 걸려와 소동이 빚어졌다는 보도를 접할 때가 있다. 붙잡힌 허위신고자는 즉결심판에 회부되지만 붙잡지 못하는 경우도 태반이다.

진짜 문제는 이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 특공대와 소방대원, 폭발물 처리반, 제독부대 및 전투용 군부대까지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돼 폭발물 수색작업을 벌이고, 그 시간동안 주변 교통은 완전 통제돼 마비상태가 된다.

이시간동안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말이 아님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고작 이 허위 신고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허위신고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단적으로 비교하여 단순무면허 운전의 경우만 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너무나 허약한 처벌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모방 범죄를 방지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허위 신고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현미·광주시 남구 백운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총 무 부	2200-51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정 치 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자 인	2200-536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사 업 2 부	2200-552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